**Conflict and Schism among the Post-Soviet Republics**

**of Central Asia**

Byong-Soon Chun

Soon-ok Myong

Faculty of Oriental Studies

Al-Farabi Kazakh National University

kskaznu@gmail.com

okmyong@gmail.com

***Abstract*** *After independence from former Soviet Union, the matters that are surfacing with the system change might not have been a problem under a single powerful unified system of the former Soviet Union but they are affecting many republics as huge obstacles in their respective progress to a new system. Many difficult problems remain to be solved such as the territorial and ethnic problems as well as conflicts involving water resources among the indigenous peoples due to the artificial division of geographical boundaries of each republic in the former Soviet Union, the multiethnic circumstances surrounding scads of non-indigenous people due to deportation, the rise of nationalism among the indigenous people, and international and interethnic conflicts due to the formation of economic rights of respective independent nation under the unified economy system.*

***Keywords:*** *Central Asia, international schism, interethnic conflict*

**들어가는 말**

중앙아시아 지역은 과거 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며 인적 물적 교류가 이루어지는 중요한 통로였지만 구 소련의 공산체제하에 굳게 닫혀진 사회였고, 소련몰락 이후 그 베일이 서서히 벗겨졌다. 이 지역의 나라들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비교적 출발은 늦었지만 공산주의 체제에서 민주적 가버넌스로 이행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모두가 독립 이후 민주공화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각 나라마다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완전한 자유와 개방을 이루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군다나 체제변화와 함께 불거지는 문제들은, 구 소련의 강력한 하나의 사회통합체제하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많은 개별 공화국의 새로운 체제의 행보에는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구 소련의 각 공화국의 지리적 경계에 대한 인위적 분할로 인한 토착민의 영토와 민족문제, 수자원 갈등, 강제이주에 의한 수많은 도래민족들과 다민족적 상황, 토착민의 민족주의 등장, 그리고 통합경제체제에서 개별 독립국가의 경제권 형성 등으로 인한 국가간 및 민족간 갈등은 풀기 어려운 과제로 남아있다.

이 글은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부터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 민족간 국가간 갈등관계와 그 요인, 그리고 이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지니게 된 맥락을 고찰하고자 한다.

**중앙아시아 역사개관**

**중앙아시아의 개념과 범위**

중앙아시아에 대한 지리적 개념설정은 1843년 흄볼트(A. von Humboldt)에 의해 처음으로 시도되었는데, 동서로는 카스피해에서 서만주 신앙린 산맥까지 남북으로는 알타이 산맥에서 히말리야 산맥에 이르는 광활한 영역을 가리켰다[1, 8]. 넓은 의미에서의 중앙아시아는 소련체제하에 있었던 서투르키스탄 지역,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동투르키스탄)와 티벳 자치구, 내몽골 자치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리고 몽골국까지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중앙아시아는 ‘투르크인들이 사는 땅’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의 투르키스탄이라 불린다. 동, 서투르케스탄으로 나누어져 있고, 불교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질적인 세계로 간주되는 티벳과 몽골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좁은 의미의 중앙아시아는 서투르키스탄 지역의 중앙아시아 5개국-우즈베키스탄, 타지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그리고 카자흐스탄 공화국-을 일컫는다.

**자연환경과 생활양식**

이 자연환경은 광활한 사막과 고산준령이 있고, 건조한 기후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인간이 살기에는 건조하고 척박한 땅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강을 낀 오아시스와 스탭지역에서 인간은 각각 다른 생활방식으로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왔다. 즉, 정주민과 유목민이라는 두 세계로 나누어져 있었다. 비옥한 땅 오아시스에는 농업을 주축으로 상업이 발달하고. 인구가 팽창하면서 도시문명을 꽃피웠다. 문물교류의 활성화로 오아시스와 오아시스를 잇는 육상교통로를 발달시켰는데 이것이 바로 동서문명을 연결했던 실크로드이다. 중앙아시아 남부보다는 비교적 강우량이 많았던 중앙아시아 북부의 넓은 초원지대와 산간의 넓은 계곡은 유목민의 세계였다. 유목민의 주된 재산은 양과 말 등 초식성 동물이며, 여름과 겨울 각각 다른 목초지를 찾아 이동하며 조립과 해체가 가능한 이동식 천막집(ger)에서 생활했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서면서 유목민을 정주화시키는 정책과 근대화에 힘입어 오늘날 유목민의 형태는 거의 사라졌다.

**민족과 언어의 기원**

오늘날 중앙아시아 지역의 언어는 우즈벡어(Uzbek), 카자흐어(Kazakh), 키르기즈어([Kyrgyz](http://en.wikipedia.org/wiki/Kyrgyz_language)), 투르크맨어([Turkmen](http://en.wikipedia.org/wiki/Turkmen_language)), 타직어(Tajik) 등 토착민 언어를 비롯하여 구 소련시대 제1언어였던 러시아어가 사용되고 있다. 토착민 언어 중에서 인도유럽어족의 페르시아어계에 속하는 타직어를 제외하고는 모두 알타이어족의 투르크어계에 속한다. 이 지역의 토착민이 두가지 어족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민족적 기원과 언어의 역사에 기인한다. 처음에는 아리아어 (인도유럽어)를 사용하는 아리아인(caucasoid)이 살았고, 9~10세기부터는 알타이계 언어(투르크어, 몽골어)를 구사하는 몽골로이드(mongoloid)가 점유하게 되었다. 인종적으로도 오랜 세월에 걸쳐 혼혈이 거듭되어왔고, 근 현대에 와서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수많은 도래민족들이 유입되었고, 언어적으로는 토착민 언어인 투르크계 언어와 러시아어를 혼용하고 있다. 단, 타지기스탄의 경우는 페르시아계 언어인 타직을 사용하고 있다.

**유목제국의 흥망**

중앙아시아 무대를 누볐던 주인공들에 대한 기록은 8세기 돌궐제국(Kök Türk Empire)에 의해 문자가 발명되기 전에는 알려진 것이 없다. 그래서 8세기 이전의 역사는, 주로 이웃 정착민의 기록에 의존하여 부분적이나마 그들의 존재를 추적해왔다. 기동력을 갖춘 유목민에 의해 위협을 당해왔던 정착민 입장에서 기록된 사료는 편파적일 수 밖에 없다. 다행히 오늘날 자료발굴과 고고학적 조사 등 다양한 측면의 객관적 시각에서 중앙아시아 유목민과 유목제국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목민은 주로 수렵과 목축을 하고 말을 사용하여 궁술과 기마술에 능하여 기동력과 함께 전쟁수행능력이 뛰어났다. 중국은 진나라 이전부터 북방 기마민족을 방어하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지만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수많은 부족이 각각 독립적 정치군사적 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나 때로는 정복하거나 연합하여 유목제국을 건설하였고, 제국의 명칭은 우세한 지배부족의 이름을 붙였다. 유목제국의 특성은 장기적 존속이 불가능하였고 역사상 많은 유목제국들이 출현하였는데, 이는 제국의 지도자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발휘하였지만 지도자가 사망할 때 분열과 혼란을 거쳐 새로운 제국이 탄생하곤 했다[1, 44-46].

유목제국으로 기원전 스텝지역의 부족연합체였던 흉노제국이 번성하였으나 서기 2세기 몽골계 선비족(Xianbei)과 후한(Eastern Han)의 연합으로 제국은 멸망했다. 약 2세기 반 동안의 힘의 공백기와 연연(Juan-juan)의 세력을 거쳐 최초의 문자기록을 남긴 돌궐제국이 6세기에 출현하였다. 8세기 당과 위구르의 연합군은 돌궐, 티벹, 이슬람 아랍의 연합세력과의 전쟁에서 대패함으로써 이슬람화가 가속화되었다. 돌궐(Kök Türks, Old Turkic)은 결국 같은 투르크 부족인 위구르의 연합체에 의해 돌궐 지배층이 무너짐으로써 멸망하고 위구르제국(Uyghur Empire)이 탄생하였다. 위구르제국은 840년 키르키즈인(Kyrgyz)에 의해 와해되고, 11세기 투르크의 셀축제국(Selcuk)은 페르시아를 완전히 통치하였지만 13세기에 와서는 몽골제국에 편입되었다. 투르크의 티무르제국(Timurid Empire)이 몽골제국을 계승하려 했지만 동 서 러시아제국과 청나라 세력의 등장과 팽창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러시아 제국의 영역으로 편입되었다.

러시아와 청의 중앙아시아 지배는 20세기 소련과 중국에 그대로 계승되어 사회주의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 체제에 편입되었다. 1990년대 소련의 붕괴로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독립하여 과거 이민족 지배의 유산을 청산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다. 소비에트 통치에 의한 종교의 금지와 탄압으로 이슬람이 위축되었다가 독립 후 범투르크 이슬람세계로의 회귀의 움직임도 보였다. 그러나 이민족에 의한 거대한 통합적 시스템에서 각 공화국으로 분리되어 오히려 각 공화국의 토착민 민족주의가 대두되고 공화국간의 갈등을 빚는 양상이 되었다. 한편 동투르키스탄이라 불리우는 투르크계 위구르가 거주하는 중국의 신장위구르 자치구는 중국당국에 의해 종교적으로나 민족적으로 상이한 한족의 유입정책으로 한족화가 진행 중이다.

**중앙아시아의 중층적 갈등과 그 요인**

흔히 중앙아시아를 투르크계 언어를 쓰고 투르크민족이 사는 지역’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지만 이민족에 의한 지배로 토착민 투르크는 여러 민족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기존의 투르크계 토착민뿐만 아니라 러시아 짜르시대와 소련시대를 거치면서 유럽 백계민족을 비롯한 다양한 민족이 합류하여 백여 민족 이상이 공존하고 있다. 소련 시대에 민족적 색체를 금지시켰지만, 사실상 러시아인이 주도하는 사회였고, 지금은 각 공화국 토착민이 주도민족이 되어 러시아인을 비롯한 비토착민은 차별 받는 상황이 되었다. 중앙아시아 인구의 많은 부분이 각 공화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는 도래민족들(non-indigene)인 것을 감안한다면 중앙아시아를 투르키스탄이라는 부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민족의 혼합과 갑작스런 체제의 변화로 공화국내 여러 투르크계 민족간의 분열, 토착민과 비토착민의 갈등 특히 토착민과 러시아인의 갈등, 각 공화국의 물적자원에 대한 배타적 점유로 인한 국가간 갈등이 야기되고 있다.

**투르크 민족의 분열**

지금의 중앙아시아 공화국은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경계를 그대로 계승하며 독립하였다. 구 소련의 토착민에 대한 정책은 민족차별이나 민족주의를 표면적으로 엄격히 금기하였으나 때로는 토착민 배려나 민족해방의 이름으로 오히려 토착민에 대한 분열정책을 썼다. 공화국들의 지리적 경계는, 1924년 소련중앙정부의 ‘인위적 선긋기’에서 출발하여 1970년대에 와서야 경계설정이 완성되었다. 확정된 공화국간 국경은 농토와 용수의 부족으로 인한 갈등, 영토분쟁을 야기하였으나 소비에트 권력에 의해 표면화되지는 못했다. 이 경계는 기본적으로 토착민족간의 통합을 저지하는 방향이었다.

토착민간의 연대의 움직임은 일찍부터 있었다. 원래 제국주의의 지배에 저항하였던 토착민의 근대 계몽주의자들에 의한 자디드 운동(Jadidism)은, 부족집단들의 차이를 통합하며 중앙아시아 전체를 아우르는 범투르크 무슬림 공동체를 꿈꾸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원래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중앙아시아 부족과 씨족집단은 소비에트 권력에 의해 재편성되었다. 즉, 부족간 분열과 차이를 민족의 차이로 확대되고, 이들의 기존의 물적 기반과 역사적 경험공간은 고려되지 않는 채 여러 민족으로 분류되어 버렸다. 소비에트 권력의 범투르크의 구심력을 와해하려 했던 것은, 토착민의 결성이나 통합은 오히려 소비에트를 위협하는 세력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스탈린 권력 하에 단행되었던 수많은 이민족의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정책의 경우도 이민족을 배치함으로써 토착민세력을 분산시켜 견제하려는 전략이었다. 또한 필요에 따라 공화국 노동자들을 다른 공화국에 이주시키기도 했다.

독립과 동시에 소아시아의 터키와 중앙아시아를 포함하는 대 투르키스탄(Great Turkistan) 연합체 창설이 시도되었으나 각 공화국으로 분열되어 서로가 경쟁적 상대로 변한 상황에서 현실화되기 어려웠다. 또한 범투르크주의 운동을 주도하였던 터키는 국내의 쿠르드민족의 문제가 있었고 중앙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능력의 한계로 더 이상 적극성을 띠지 못했다[1, 33].

독립 이후 시도된 중앙아시아의 범투르크 결속의 움직임은 내용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성과를 이끌어 내기 어렵고 투르크 형제국이라는 정서적 연대로만 기능할 뿐이다. 중앙아시아의 투르크 제민족은 통합보다는 오히려 민족간 분열과 공화국간 갈등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여기에는 이민족 지배자에 의한 민족분산정책의 일환이었던 인위적 경계설정, 투르크 부족민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민족분류, 강제이주 등의 역사적 맥락에서 기인된 것이다.

**반러시아인 정서**

중앙아시아인의 반러시안 감정의 시작은 이 지역을 정복한 러시아 제국주의시대를 거슬러 올라간다. 이 지역은 러시아제국의 팽창정책과 남하정책으로 합병되었고 러시아 제국의 붕괴 이후에도 토착민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대로 러시아인이 지배하는 소련에 편입되어버렸다. 토착민의 입장에서 러시아는 자신의 영역을 짓밟았던 이방인이었다. 토착민은 수세기 동안 영토와 주권을 상실했고 민족종교와 언어 등 민족정체성 상실했다는 피해의식과 이로 인해 러시아인에 대한 적대적 감정이 뿌리내려있다. 1920년대 후반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농업집단화 정책으로 인한 유목민의 대 기아, 소비에트 권력에 의한 토착민 지식인의 대 탄압은 큰 상처로 남아있다. 또한 소비에트 권력 하에서의 각 공화국의 자치는 형식적 표방에 그쳤고 내용적으로는 대 러시아주의를 지향하였다. 소비에트 주류에 편입되기 위해서 토착민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은, 언어적으로 러시아화되어야 했고 고위관리나 전문직에는 러시아인 위주로 등용되는 등 비러시아인들은 2등 국민으로 간주되었다. 그리고 각 공화국에서 생산되는 물자는 중앙으로 이동하여 재분배하는 정책으로 러시아 공화국과 슬라브족 공화국을 중심으로 재분배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중앙아시아인의 불만을 고조시켰다[1, 36]. 중앙아시아 토착민의 반러 감정은 독립 직후 우즈벡 공화국에서의 러시아인 집단 구타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것은 토착민의 러시아인에 대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러시아인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소수민족으로 전락한 러시아인**

독립 이후 토착민 공화국의 토착민 민족국가 건설의 시도는 러시아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게는 큰 위협으로 작용한다. 현재 중앙아시아 지역의 전체 러시아인은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은 각 공화국의 민족국가 건설과정에서 소수민족과 함께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특히 소비에트 언어인 러시아어가 아닌, 각 공화국의 토착민 언어가 국가어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착어를 새삼 배워야 하는 부담과 갈등을 안고 있다. 러시아어 구사자의 토착민 언어로의 동화가 어려운 것은 기본적으로 토착민어는 열등언어로 간주되어왔기 때문이다 [2]. 심지어 도시의 엘리트 토착민들 조차도 언어적으로 러시아화되어 토착어를 구사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독립 직후 토착어 중심의 언어정책과 토착민의 주권회복운동으로 러시아인, 독일인, 유대인의 모국으로의 대 이주현상을 야기시켰는데, 특히 지식인과 기술자 등 전문인력의 유출로 인한 공백으로 각 공화국들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였다. 러시아인을 비롯한 이 지역의 이민족은, 본국으로의 재 이주의 시도도 꺼리게 되었는데 이는 본국에서도 동족이지만 이방인 취급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모국 러시아로 귀환한 러시아인은 ‘순수한 러시안’이 아닌 ‘중앙아시아로부터 온 러시아인’ 이라 하여 차별대상이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에 소수민족으로 남아있는 러시아인의 존재는, 러시아 정부의 보호를 받거나 영향력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각 공화국 입장에서는 민족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위협과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중앙아시아 지역의 러시아인 인구밀도가 높은 곳, 특히 러시아 국경과 접하고 있는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의 경우 자치정부나 독립 혹은 러시아로의 복속을 요구하려 했던 움직임은 토착민 공화국으로서는 큰 위협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부의 수도 알마티(Almaty)에서 북부 지역과 인접한 아스타나(Astana)로의 수도이전은, 잠재적 분열 가능성이 있는 북부 카자흐스탄을 적극적으로 관리, 통제하겠다는 카자흐스탄 독립정부의 의지였다. 카자흐스탄 정부의 의도대로 새로운 수도권으로의 카자흐 인구를 흡수하고 적극적인 인구정책으로 점차 러시아인의 인구밀도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 이것은 소비에트 권력이 토착민의 힘을 분산시키기 위해 토착민 지역에 이민족을 정착시켰듯이 독립정부도 러시아인 밀집지역에 토착민을 이주시켜 분리주의를 차단하고자 했다.

**종교적 이분법: 무슬림과 비무슬림**

중앙아시아 사회주의의 종말로 두 부류의 이질적 종교가 부각되었다. 이 지역의 이슬람의 역사는 그 뿌리가 아주 깊다. 독립 직후 소비에트 시기 종교적 공백기를 만회하듯 사원건립이 왕성하게 부흥하며 종교적으로 이민족 지배이전의 시대로 회귀하고자 했다. 민족이나 지역에 따라 그리고 공화국의 종교정책에 따라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이슬람 율법을 지키지 않는 느슨한 형태의 이슬람 신자들이 많다. 그러나 토착민 대부분은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이슬람이라 인식한다. 소비에트시대의 종교적 억압으로 이슬람의 형식적 측면은 약화되었지만 세대와 세대간 계승되어왔으며 정서적으로 토착민의 이슬람에 대한 유대가 깊음을 알 수 있다.

소비에트의 권력에 의한 종교적 자유의 박탈로 잠재되어있던 토착민 이슬람과 러시아인 러시아정교라는 대립적인 인식적 이분법은 독립 이후 두드려졌다. 종교적 대립은 소비에트 이전 러시아 제국의 이반4세의 중앙집권체제확립 및 영토확장과 함께 반이슬람정책이 발단이 되었다. 이것은 역으로 반기독교 감정이 역으로 작용하여 러시아 통치 밑에서도 이슬람을 끝까지 고수하게 하는 힘으로 작용하였다.

독립 이후 범투르크 연합의 움직임에 대한 경쟁세력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과 같은 이슬람 국가주의를 도입하자는 세력도 있었지만 이미 민주적 정치체제와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고 서구식 모델을 지향하는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수용되기 어려웠다. 투르크계 공화국 정부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원리주의 이슬람과 공격적, 극단적 이슬람 세력은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투르크 토착민들은 생활 이슬람을 실천하고 있고, 이슬람 이외의 종교와 문화에 대해서는 이질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수자원 갈등**

두 개의 강인 아무다르야(Amu Darya)와 시르다르야(Syr Darya)에 걸쳐있는 중앙아시아 5개국의 수자원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다. 1989년 7월 키르기즈스탄에서 영토와 수자원 권리주장과 관련하여 타지기스탄의 주민들과 충돌하였고, 1995년 키르기즈스탄 오쉬(Osh)지역에 우즈벡인과 키르기즈인간에 물사용에 대한 다툼으로 300명의 주민이 사망한 사례도 발생하여[5, 10-11] 투르크계 민족간 분열이 과열되고 있다.

독립국가들은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찾지 못한 채 구 소련의 통합된 수자원 운영체계를 물려받을 수 밖에 없었다. 5개국은 수자원을 둘러싼 국가간 충돌을 막기 위해 소비에트 시기의 수자원 관리 기구(BOVs: Basin Valley Organizations)를 그대로 유지하고 국가간 수자원 조정 위원회(ICWC: Interstate Coordination Water Commission)을 창설하여 합의점을 찾으려 노력하였으나 실패하고[3, 4]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형국이다.

하류지역의 나라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은 방대한 영역의 농토에 농업용수로 필요로 하고 있으나 상류지역의 키르기즈스탄과 타지기스탄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수력발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지역은 갈수록 농토개간을 확장하고 있지만 물부족난을 겪고 있다. 더군다나 면화와 농작물은 대부분 수출상품으로 국가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므로 물의 안정적 확보문제는 국가의 기간을 흔드는 일이 되었다.

1992년 알마티 조약으로 수자원 할당제를 도입하였으나 수자원 사용량을 감시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하류지역 국가들은 사용량을 초과하였고 충분한 물이 공급되지 못하여 불만을 낳았다. 1998년 다시 바터제(Barter system) 실시를 합의하여 하류지역 국가들의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상류국가에 지원하고, 대신 상류지역 국가는 동절기 수력발전을 중단하여 봄 여름 관개용수를 안정적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그러나 상호간 합의에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고 이를 통제할 법적 강제장치도 없었으므로 불신만 더해갔다. 상호불신관계에서 제한된 수자원으로 갈수록 인구는 늘어나고 하류지역 농토개간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

**페르가나의 화약고: 영토와 민족분쟁**

페르가나 계곡(Ferghana Valley)은 민족과 국경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소련 붕괴 이후 지금까지 분쟁과 유혈충돌이 잦은 중앙아시아의 화약고이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페르가나 지역 분쟁으로는, 2013년 키르기즈스탄 내 우즈베키스탄 독립령인 소흐(Sokh)의 주민(우즈벡)이 키르기즈스탄 국경수비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5명이 총상을 당했던 사건이다. 이로 인해 소흐주민들은 키르기즈인 30여명을 인질로 잡고 무기를 탈취했다. 2010년 6월에는 키르기즈스탄 오쉬(Osh) 인근지역에서 키르기즈인과 우즈벡인 사이에 유혈충돌이 일어나 1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0 여 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Source: Oblasts in the Ferghana Valley area. GRID Arendal (2012). [Link](http://www.grida.no/graphicslib/detail/oblasts-in-the-ferghana-valley-area_7488)

페르가나 지역은 중앙 아시아에서 강을 끼고 비옥한 땅으로 가장 인구가 밀집된 곳의 하나이며,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기스탄 세 나라의 국경과 접하고 있고 국경이 복잡하게 얽혀있고 국경분쟁이 첨예한 곳이다. 1876년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기 이전에는 코간드 칸국(Khanate of Kogand)의 통치를 받았다. 그러나 소련시대 영토분할 작업에서 같은 부류의 집단개념을 무시한 채 임의로 그어버린 경계로 독립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불안정한 지역이 되었다. 이 지역에 대한 소비에트의 경계설정에는 자연적인 지리적 경계도 따르지 않았고 언어나 집단, 경제생활권에 있어서의 동질적 단위도 고려하지 않았던 것은 중앙아시아 공화국들의 분리주의운동의 가능성을 염려하여 전략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4, 315].

페르가나 협곡에서 가장 분쟁이 뜨거운 지역은 키르기즈스탄의 바트켄(Batken)과 오쉬(Osh)이다. 바트켄은 키르기스스탄 소재지이나 사방으로 고립된 우즈베키스탄과 타지기스탄의 독립령들(enclaves)이 있는데, 여기에는 명확한 국경이 부재하여 독립령들에 거주하는 우즈벡인이나 타직인은 본국과 연결되는 통로부재로 인한 통행의 부자유를 겪어야 했다. 소련시대에는 통행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독립 이후에는 공화국간 엄격한 국경통과의 절차를 밟아야 했고 어떤 경우 비자까지 필요하게 되었다[4]. 같은 집단의 한 마을을 가로지르는 국경이 설정된 곳은 건너편 친척방문도 어렵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로 국경 인근지역의 우즈벡인의 불만과 분노의 표출은 국경수비대와 충돌을 빚었다. 국경 인근 우즈벡인이 많이 거주하는 키르기즈스탄의 오쉬(Osh)에서도 우즈벡과의 민족갈등이 발단이 되어 폭력과 살상으로 이어졌다. 2010년의 유혈충돌의 경우, 바키예프 전 대통령의 퇴진을 인정하지 않았던 키르기즈스탄 남부 지방세력과 오히려 임시정부를 옹호했던 우즈벡인과의 갈등이 있었고, 결정적으로 거주지 확보 문제에서 이민족으로 차별을 받았던 우즈벡인과 대규모 충돌이 빚어진 것이다.

소비에트시대 경계설정 당시 페르가나 지역의 주민들은 민족적 귀속감보다는 전통적으로 이어온 생업과 경제적 생활양식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 [4, 318]. 독립 공화국의 시대에 와서 국경폐쇄로 인한 경제적 생활권의 단절은 주민들의 기본 생존권을 위협했고, 이에 더하여 수자원 문제와 빈곤, 공화국의 민주적 가버넌스의 경험부재, 그리고 폐쇄적 민족주의 등이 민족간 그리고 공화국간의 분쟁으로 확대된 것이다.

**나가는 글**

오늘날 중앙아시아의 민족간 공화국간 갈등은 이 지역을 지배했던 이민족이 남긴 유산이며, 이 유산의 많은 부분은 소비에트 체제에서 비롯되었다. 공화국들의 독립 이후 표면화된 갈등과 분열은 하나의 벡터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토착민과 이민족의 갈등, 투르크 민족의 내분, 그리고 공화국간 갈등으로 복합적 양상을 띠고 있다. 소비에트 체제의 붕괴로 이민족 지배의 종식을 가져왔고 토착민은 상실했던 주권과 전통회복을 위해 민족국가 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타자에 의해 과거 자아상실에 대한 피해의식과 부정적인 감정은, 이미 100 여 개 이상의 다민족을 구성된 각 공화국에 다문화 국가로서 사회통합과 안정을 추구하는데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과거 체제로부터의 물려받은 공화국간 경계설정과 민족분리정책은 투르크계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민족간 반목, 영토분쟁, 및 수자원 갈등으로 얼룩진 대표적인 지역이 페르가나 협곡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갈등은 지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같은 투르크계 민족의 분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개별 당사자 지역집단과 민족단위에서 스스로 해결능력을 넘어서는 문제이다. 국가간 양보, 성숙된 합의와 중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각 공화국간 경쟁체제에 돌입한 상태에서 토착민 위주의 민족주의적 성향이 가세하여 갈등양상이 완화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폐쇄적인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갓 벗어나 민주적 가버넌스의 경험부재와 정치적 독재, 부정부패의 만연 등은 사회발전과 안정을 저해하는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앙아시아의 풍부한 자원, 민주주의와 사경제체제의 도입, 토착민의 자아 회복, 극단적 이슬람과 민족주의 배제정책, 다문화공존과 톨레랑스의 외침 등은 미래지향적이고 공생으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 요소라 볼 수 있다. 특히 세계종교회의를 주도하여 민족간 종교적 화해와 화합을 강조했던 카자흐스탄의 경우는 좋은 본보기로 여겨진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효율적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곳곳에 불안요소들이 잠재해 있고 유혈충돌을 불사하는 첨예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국가간 민족간 갈등과 다양성을 뛰어넘기 위해 모든 갈등과 분열의 문제를 인류보편적 가치에 더 비중을 두고 공존을 모색하는 열린 자세와 인류공동체에 대한 자각이 절실한 시점이다.

참고문헌

1 최한우. 1992. 중앙아시아. 서울: 폐내기.

2 Myong, Soon-ok, Chun, Byong-soon. 2013. “Kazakhstani Koreans’ Conflict of Linguistic Identity: In–between the Sovietized and Kazakhstani Citizens.” World Academy of Science, Engineering and Technology 75: 13-21.

3. 구은조. 2011. “중앙아시아 수자원 갈등연구: 원인과 현황분석을 중심으로.” 중앙아시아 카프카즈연구 3(1): 3~30.

4. 강봉구. 2012. “중앙아시아 페르가나 지역의 국경 분쟁,” 21세기 중앙아시아의 지속과 변화. Asia-Pacific Center, Hanyang University. Pp. 315-330.

5 Smith, David R. 1995. “Environmental security and shared water resources in post‐soviet Central Asia.” Post‐Soviet Geography, pp. 10-11.